

현안과제 연구

# 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작성 연구

의뢰기관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담당관)

연구자 : 이 상 진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II.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1. 제정이유	2
2. 주요내용	2
III.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5
IV. 결론	38
참고문헌	3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통합적인 관리·보호·복원대상으로서 “하구” 환경에 대한 공간단위 개념과 범위의 부재로 직접적인 관리·보호·보전의 대상이 되지 못해 통합적·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소관부처가 해당법률을 근거로 하구를 관리하고 있음
- 하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개별법, 소관부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관련 법률)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수생태법, 방조제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0여개 법률
- 하구정책의 문제점, 국외정책 및 복원사례 등을 통해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리하여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의뢰한 것임
- 다음에서 제시한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가 작성한 법률(안)과 과거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의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고<sup>1)</sup>, 한국수산개발원의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재 작성한 것임

1)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법률안(동아대학교 심영규 교수)

## Ⅱ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 및 이용 중심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하구관리정책과 체계적·단편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하구관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구(역)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하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의 추진과 재정투자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혼합되는 전이수역으로서 매우 독특한 환경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환경 친화적인 이용·관리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하구보전·관리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필요
  - 지구생태계 중 하구의 생태적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립, 인공구조물 설치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한 하구순환의 인위적 단절, 하구습지 및 하구서식지의 파괴 등 하구(역) 고유의 환경적·생태적 특성과 기능, 지형다양성, 생물다양성 등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 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 ① 하구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실질적인 관리범위인 하구역의 범위를 하구수역과 하구육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 ② 하구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통합관리, 비용과 이익의 공평배분,

지역이익의 우선고려, 참여와 협력, 조장적 기능 등 하구관리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 ③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시책과 계획은 하구역 단위로 통합적으로 수립·시행
- ④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현황, 오염현황, 이용·관리실태, 수질 등 하구에 관한 기초조사를 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조사 및 정밀조사 실시
- ⑤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하구종합관리정보망을 구축·운영
- ⑥ 하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하구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보고·제출하는 한편, 하구의 보전·관리정책에 반영하고, 하구역별 하구관리시행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⑦ 하구의 보전·관리, 복원·개선,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하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하구별 현안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심의·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지역하구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보전·관리 또는 개선·복원할 필요가 있는 하구역을 하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하구보호구역에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구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제출
- 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구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조사·관찰하고 그 결과를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제출

- ⑩ 관할 시·도지사가 하구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시·도하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시·도하구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⑪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이용·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구보호구역중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고, 하구의 개선·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⑫ 하구의 개선·복원사업 시행자가 개선·복원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⑬ 시·도지사가 관할 하구를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로 지정해줄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
- 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구 관련 소관 업무의 범위안에서 다양한 하구의 개선·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⑮ 하구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고, 하구의 보전·관리, 조사·연구·분석, 개선·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하구환경보전기금 설치·운용
- ⑯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구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의 제한, 하구서식지 복원 및 보존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결을 권고

### Ⅲ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구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구의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하구환경을 보전하고, 하구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하구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구”라 함은 개방된 바다와 연결된 하천의 어귀 또는 어귀의 일부 분으로서 하천의 담수가 연안해역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하구역”이라 함은 하구 및 하구에 연결되어 있어 육지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 담수가 해수와 혼합되어 염분의 희석이 이루어지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하구수역과 하구육역을 말한다.
3. “하구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연안해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감조역 상류경계
  - 나. 인공구조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인공구조물을 포함하여 과거 자연 상태에서 연안해역으로 유입되던 하천의 감조역 상류경계
  - 다. 하천 담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해수 염분이 상당한 정도로 혼합·희석되는 연안해역
4. “하구육역”이라 함은 하구에 연결되어 있어 하구수역에 의해 지속적으

로 영향을 받는 하천의 유역(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지류하천의 유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하구환경”이라 함은 하구를 구성하는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하구생태계”라 함은 하구를 구성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7. “하구의 훼손”이라 함은 하구를 매립·준설하거나 하구에 시설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천 담수와 해수의 혼합을 차단·방해함으로써 하구 본래의 형질과 특성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등 하구역을 보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하구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개선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하구의 개선”이라 함은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하구 본래의 특성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하구의 복원”이라 함은 ‘하구순환의 복원’과 ‘하구습지의 복원’을 말한다.

가. “하구순환의 복원”이라 함은 배수갑문, 하굿둑, 하구언,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하여 하구수역의 자연적 흐름이 차단되어 훼손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를 가능한 자연상태에 가까운 조건과 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나. “하구습지의 복원”이라 함은 하구역의 훼손된 습지생태계 또는 수변 친수공간을 가능한 자연상태에 가까운 조건과 기능을 갖도록 회복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이라 함은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를 최대한 자연상태에 가깝게 보전·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하구역의 수자원, 생물자원, 토지, 기타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물 등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관리 또는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역의 구체적인 범위 및 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하구관리의 기본원칙)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1.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시책은 미래 세대의 하구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2.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시책은 국민의 삶의 질,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양·하천·육지·대기간 연계성과 생태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3. 하구의 보전·관리에 따르는 비용과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따르는 이익은 이해관계인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하구의 고유한 환경적·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 및 관리를 지원한다.
4. 모든 이해관계인은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하구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실태와 변화를 상시 파악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하구의 훼손을 방지하며, 훼손된 하구는 최대한 개선·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구를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조사·연구·평가,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모든 국민은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하구의 이용에 있어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구의 관리·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

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하구의 관리·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하구의 통합관리

제8조(하구의 통합관리 원칙)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시책과 계획은 각 하구역 단위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하구의 기초조사 등) ①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현황, 오염현황, 이용·관리실태, 수질 등 하구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련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결과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수질 등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련 시·도지사는 하구의 개선 또는 복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련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조사위원회는 공동조사지침을 이용·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의 기초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의 기초조사 등의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의 내용·방법,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공동조사지침의 이용·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하구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전산화한 하구종합관리정보망(이하 “하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에 있어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의 기초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활용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하구역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정보망의 작성, 유지, 개선,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을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상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운영위원회는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그 정보를 연구·분석·축적하고, 하구정보망을 유지·개선·운영하며, 그 결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보고·제출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게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하구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하구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시책 및 목표
2.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 및 방안

3.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현황과 보전·관리계획
  4. 하구오염으로 인한 환경·생태계 영향과 피해에 관한 사항
  5. 하천, 수자원, 생물자원, 토지, 시설물 등 하구의 개발 및 이용 현황
  6. 수자원공급, 농·수산업, 항행 및 레크레이션, 교육·연구, 토지이용, 생태기반 산업, 하구습지 등 친수공간 및 수변구역 조성·관리 등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하구의 수질측정망 구축 및 운영계획
  8. 하구 오염물질 관리, 하구 환경·생태계 오염 예방·관리 및 수질개선·보호·관리계획
  9.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의 기초조사 등 하구 환경 및 생태계의 조사·연구·분석계획 및 방안
  10.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방안
  11. 기후변화가 하구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영향의 저감 및 적응 대책
  12. 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하구의 개선·복원 전략 및 복원사업 추진방안
  14. 하구에 관한 교육·연구·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계획
  15.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16. 하구역 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17. 그 밖에 하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요청 등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보고·제출하고, 하구의 보전·관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하구역별 하구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관할 하구역에 대한 하구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관할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현황과 보전·관리계획
3. 관할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사업의 시행·운용계획
4. 관할 하구의 하천, 수자원, 생물자원, 토지, 시설물 등 이용·관리 현황 및 계획
5. 관할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의 조사·연구·분석계획
6. 관할 하구보호구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관할 하구에 관한 교육·연구·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계획
8.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원·관리 등 대책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하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10. 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공동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방안에 관한 사항
  11. 기타 시행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에 반영·추진하고, 반영 및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조정결과에 따라 관할 하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⑥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시행계획의 신청과 승인 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의 특별시행계획(이하 “특별계획”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특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관할 하구 내 구도심 및 낙후지역 재개발에 관한 사항
2. 관할 하구 내 생태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할 하구 내 농지보전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관할 하구 내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관할 하구 내 자연·인공습지, 친수공간 및 수변구역의 조성·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관할 하구 내 재해 및 염해방지, 수질개선 및 경관보호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7. 관할 하구 내 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 하구 내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9. 관할 하구의 하천, 수자원, 생물자원, 토지, 시설물 등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할 하구의 개선 및 복원에 관한 사항
11. 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공동특별계획의 수립·시행 방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획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특별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획의 작성·제출·승인 및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하구역 관

런 계획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하구역 관련 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종합계획 등의 준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에서 하구의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하구관리위원회) ①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하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특별계획의 심의·승인에 관한 사항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하구역 관련 계획 및 사업의 통합·조정
5. 하구의 기초조사 등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하구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하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하구의 보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간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재정의 부담·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특별계획의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개선 및 복원대상 하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하구의 개선·복원 계획 및 대책의 심의 및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13. 하구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1. 국무총리실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각 소속부처를 대표하는 자로 지명된 자 및 하구 관할 시·도지사
2.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하구관리사무국)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하

에 하구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사무직원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은 해양수산부에 소속하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사무국의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제1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하는 자로서 일반직 공무원 중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2.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하구별 지역하구관리위원회 등) ①각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하구관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계획의 작성·제출·승인신청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공동시행 계획 또는 공동특별계획의 협의 및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관할 하구의 보전·관리와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 간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도 하구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신청, 개선·복원계획 및 개선·복원사업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관할 하구의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지정·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관할 하구에 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정보제공, 민간활동 및 대중참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할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하구의 환경 및 생태계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지역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소속하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지역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역협의체 및 지역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역 위원회와 협의·조정한다.

⑨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그 밖에 본 조 규정에 의한 지역위원회, 사무기구, 지역협의체 및 지역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대외협력 등

제19조(국제 하구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 협력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하구의 보전·관리 및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남·북한 하구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 협력)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구역이 민족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구역의 공동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장 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21조(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관리 또는 개선·복원이 필요한 하구를 하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습지, 갯벌, 해변, 암석, 모래톱, 삼각주, 사퇴 등 하구의 자연상태와 자연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2. 논, 밭, 염전, 양식장, 해수욕장 등의 조성·유지를 위한 수자원·토지의 이용 등으로 인해 하구의 자연상태와 자연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지역으로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가치가 인정되거나 개선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로, 도로, 항만, 산업단지, 도시, 수변공원 등의 조성·유지를 위한 준설·매립 등으로 인해 하구의 자연상태와 자연서식지가 훼손된 지역으로서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개선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그 밖에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가치가 인정되거나 개선 또는 복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를 상실하거나 개선·복원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된 하구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하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하구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구의 이용·관리행위 또는 시설물·구조물 등의 설치·이용행위, 기타 하구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된 하구보호구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전·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하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변경·해제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하구보호구역의 소재지 및 지정·변경·해제 면적과 범위
2. 하구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 및 목적
3.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의 지형적 특성
4.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의 자연서식지 특성



5.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의 이용·관리 특성
6.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의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 및 이용·관리 현황
7.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과 겹치는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제지역의 지정·관리 현황
8. 기타 지정·변경대상 하구보호구역의 환경적·생태적 현황 및 특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해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하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하구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이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구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관리방안
2. 하구의 환경친화적인 이용·관리방안
3. 해당 보전·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행위가 종합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그 해소방안
4.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5.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무총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제출하는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조정결과에 따라 소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국무총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하구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하구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이용·관리에 관한 상황을 수시로 조사·관찰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하구보호구역의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결과 및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전·보호구역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찰 및 제출의 내용·방법, 통합·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하구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보호구역의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을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26조(하구보호구역의 주민지원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구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하구환경 오염물질 수거사업
2. 하구환경 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구도심 및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4. 생태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5. 관광지 조성 및 지원사업
6. 환경친화적인 농·공업단지의 조성·지원사업

7. 생태기반 산업의 육성·지원사업
  8. 하구환경 및 하구생태계에 대한 연구·교육활동의 육성·지원사업
  9. 그 밖에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지원사업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하구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하구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등을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 ⑤그 밖에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절차·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하구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구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  
민이 당해 하구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구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도하구보호구역의 지정·관리) ①관할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하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하구보호구역에 준  
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하구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하구환  
경 및 하구생태계를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구역을 시·  
도 하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관할 시·도하구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하구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한 때에는 당해 구역의 위치·면적, 지정·변경·해제연월일, 그 밖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대상 시·도하구보호구역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하구보호구역을 공동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시·도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하구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하구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시·도하구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하구보호구역에서의 이용·관리행위 등 협의)** 하구보호구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관리행위 등을 하거나 이용·관리행위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 및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하구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장 하구의 개선 및 복원

**제30조(개선 및 복원대상 하구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이용·관리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 보호구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구를 개선 및 복원대상 하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하굿둑, 배수갑문 등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의해 자연적인 하구 순환이 차단됨으로써 하구의 고유한 특성이 상실된 하구로서 당해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제거 및 개선을 통해 하구순환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 하구
2. 하구의 이용·관리로 인해 하구습지, 하구서식지 또는 수변 친수공간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하구로서 하구환경·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당해 훼손된 하구습지, 하구서식지 또는 수변 친수공간을 개선·복원할 필요가 있는 하구
3. 하굿둑, 배수갑문 등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하구의 이용·관리 등으로 인해 하구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수량이 감소함으로써 하구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하구로서 염해방지, 홍수방지, 수질개선, 용수확보, 해수유통, 선박의 통항 등을 위해 개선 또는 복원이 필요한 하구
4. 그 밖에 하구의 고유한 환경적·생태적 기능과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하구로서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해 개선·복원할 가치가 있는 하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개선 및 복원대상 하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하구의 개선·복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개선 및 복원대상 하구의 효율적인 개선·복원사업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해당 하구의 개선·복원계획(이하 “개선·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복원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조정결과에 따라 개선·복원계획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선·복원계획의 추진 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의 개선·복원기술의 개발, 개선·복원 전문기관·인력의 육성 등 개선·복원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개선·복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선·복원계획의 내용) 개선·복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구개선·복원사업의 목적·성격 및 기본방향
2. 하구개선·복원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3. 하구개선·복원사업의 연도별 시행내용 및 계획
4. 개선·복원사업의 소관 업무가 둘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걸쳐있는 경우 공동개선·복원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6. 기타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하구의 개선·복원사업의 위임 및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의 개선·복원사업(이하 “개선·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해당 하구에서 개선·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하구의 개선·복원사업실시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복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자가 개선·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복원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구의 개선·복원사업실시계획(이하 “개선·복원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를 위임·지정한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선·복원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위탁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선·복원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복원실시계획이 수립·변경되거나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시·도지사의 개선·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신청) ①시·도지사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준하여 관할 하구를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로 지정해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개선·복원 대상 하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본 조 규정에 의해 개선 및 복원 대상으로 지정된 하구에 대하여 별도의 개선·복원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개선·복원 대상 하구의 관할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시행·보고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복원실시계획에 준용한다.

⑧그 밖에 시·도지사의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하구의 개선·복원대책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구 관련 소관업무의 범위 안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개선 및 복원 대상 하구의 수질개선, 염해방지, 홍수방지, 용수확보, 해수유통, 선박의 통항, 하구습지·하구서식지·친수공간의 복원·조성, 생물다양성이 보전 등 하구의 개선·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제출된 개선·복원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조정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합·조정된 하구의 개선·복원대책이 공동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비용의 부담) ①개선·복원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38조(원인자 부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구내에서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개선·복원사업을 필요하게 한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선·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6장 보 칙

제39조(하구환경보전협력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하구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으로서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내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
3. 그 밖에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하구를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하구환경보전협력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환경보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하구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관리) 하구의 보전·관리, 조사·연구·분석, 개선 및 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구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환경보전협력금
2. 국가 및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수익금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하구의 보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
2. 하구의 개선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의 시행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획의 시행에 대한 지원
4. 하구의 개선·복원기술의 연구·개발, 개선·복원 전문기관·인력의 육성
5. 하구의 조사·연구·분석 및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운영
6. 하구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7. 하구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
8. 하구 관련 교육·홍보 및 민간활동 지원
9. 그 밖에 하구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①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한 날부터 3월로 한다.

제44조(관계기관의 협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통합·조정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하구보전·관리협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하구보호구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의 제한, 하구서식지 복원 및 보존 그 밖에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이하 “하구보전·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되는 하구보호구역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을 하구보전·관리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하구보전·관리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하구보전·관리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하구보전·관리협정의 체결방법·내용·절차 및 이행방안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구의 보전·관리 및 개선·복원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무총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7장 벌 칙

제48조(과태료) ①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V 결 론

-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적인 관리·보호·복원대상으로서 “하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하구정책의 문제점, 국외정책 및 복원사례 등을 통해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리하여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는 것임
-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우수한 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 및 이용 중심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하구관리정책과 기계적·단편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하구관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구(역)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총 7장 4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총칙, 하구의 통합관리, 하구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하구의 개선 및 복원, 하구의 보전·관리·개선·복원 재정기반 확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 마련한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 및 협의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법률(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안관리법, 2015
2. 국가법령정보센터, 습지보전법, 2015
3.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
4. 국토해양부,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2012
5. 심영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 법률안, 2012
6. 심영규,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법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하구관리체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11

